

광주경찰청, 조직개편 착수...“수사부서 인력 효율화”

올 연말까지 경제팀 증원 논의 동·남부서도 통합형사팀 운영 지구대·파출소 등 인원 재배치

광주경찰청이 치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지역·기능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내년 인력 배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용한 광주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광주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치안 정책 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우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제팀 증원, 동·남부서 통합형사팀 운영 등 수사부서 인력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남부서 통합형사팀 운영은 기존 강력팀과 형사팀을 통합하는 동시에 과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개 팀을 통합하면 형사팀이 담당하던 폭행, 상해 등과 강력팀 업무인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을 통합형사팀에서 도맡는다. 또한, 일선 경찰서의 경제범죄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급변하는 치안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재배치하고 근무체계를 개편했다. 당시 지구대·파출소 인력 재배치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시행 이후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이에 축소·폐쇄 지역에 다목적 기동대 등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개편안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날 임 청장은 일부 사건 수사의 진행 과정도 설명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는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 혐의로 입건된 4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조선대 교수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는 개인 비위 행위로 전임교원 1인을 송치했고, 나머지 수사대상자인 교수 1인에 대해 채용 명목 금품 요구, 논문 대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혐의 규명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해 관련 혐의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관한 대응은 현재까지 관련 혐의 입건자는 없고, 업무개시명령 관련 처벌 대상자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경찰은 또 올해 8월 16일부터 ‘악성 사기’ 3대 분야 7대 과제 특별단속을 전개해 3,337건의 사건을 수사해 1,36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건으로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정부 지원 청년 전세자금 62억8,000만원을 가로챈 범죄에 가담한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수백억대 피해를 양산한 이른바 ‘무자본 겹투자, 강동전세’ 사기범도 구속 송치했다. 임 청장은 “지난 6월 22일 취임 이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통신 EXPO 드림 페스티벌
지난달 30일 나주 동진대 에너지클러스터 내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열린 ‘2022 통신 EXPO 드림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 ‘빌딩포인트코리아’가 로봇개를 선보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파업차량 불법주차 단속...서·북구 과징금 41건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도로 주변에 줄지어 선 파업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이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날 가이 광주공장 일원에서 밤샘주차(0-4시) 단속을 벌여 16건을 적발했다.

서구는 0시를 기해 밤샘주차 중인 화물차에 경고장을 부착했고,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코카콜라 광주공장 등이 있는 북구는 파업 초기인 지난달 25일 0시에 밤샘주차 25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처분했다. 밤샘주차 단속은 동일 행위에 대해 1회만 이

뤄지기 때문에 추가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변 간선도로 가장자리를 점거한 대형 화물차에 대해 경찰의 원천적인 요구에도 단속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파업 여파가 크지 않은 동구와 남구에서는 일상적인 밤샘주차 단속만 이뤄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상습 밤샘주차 구역에서 동구는 15건, 남구는 9건을 적발해 계도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 법인이사 중임횟수 제한 정관 개정

전국 유일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법인이사 중임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공영형 사립대 발전을 마련했다. 조선대는 최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제95차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으로 조선대는 민립대학이 명문화됐고,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 및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학설립 정체성이 확립되는 한편, 대학 사유화 방지 및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진일보된 정관 개정은 교육부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됐다.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정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지지를 결집했다. 개정된 정관을 살펴보면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및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법인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및 대부분의 사립대학 정관에서는 법인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이사 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세종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돼 조선대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고검, 강진원 강진군수 직접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판단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무혐의 처분했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광주고검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공모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

토지 매매 (담양) (장성)

▶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

- 임야 : 7,500평
- 1차 허가 완료 , 개발토지, 최고 위치

-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
-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 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 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서구 풍암동(상가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어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공장) ▶ 감평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광산구 하남동(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 16억
전남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숙박시설) ▶ 감평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농지) ▶ 감평가 17억 → 최저가 12억

010-2614-9801